

## 經濟學 敎育의 社會的 便益과 費用: 經濟學 敎育의 바람직한 方向摸索을 위한 한 接近\*

郭泰元\*\*

### 논문초록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경제학 교육의 문제는 매우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고 다각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합리적 대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문제에 관한 체계적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인식에서 이 글은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의 접근방법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교육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문제가 되는 사안의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항목별로 파악할 수 있다면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고쳐야할지를 파악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학 교육과 관련하여 전략적인 변수는 사회적 비용보다 편익 쪽에 있으며 그 중에서도 사적인 편익보다 공적인 편익에 있다는 것이 이 글의 잠정적 결론이다. 경제학을 배움으로써 얻는 개인적인 편익이나 비용과 관련된 선택들은 불완전하지만 시장원리에 의해서 비교적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나 경제학 교육의 외부효과로 주로 구성되는 공적 편익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정책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에서는 공적인 편익을 파악하고 평가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투입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핵심 주제어: 경제학 교육, 비용편익분석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A2

\*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이동호 교수 및 윤창호 교수께 감사드립니다.

\*\*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I. 서론

최근에 와서 경제학 교육에 대한 위기의식이 경제학자들간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 증거의 하나가 2000년에 출범한 한국경제학회 내에 경제학교육위원회를 상설화한 것이다. 그리고 2001년 연합학술대회에서 한국경제학회가 주제로 내건 이슈가 바로 경제학 교육이라는 점도 이러한 위기의식을 반영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제학계는 이미 19세기말부터 경제학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중고등학교에서의 경제학 교육문제도 이때 이미 논의되기 시작하였다.<sup>1)</sup> 1944년에는 AEA에 의해서 Horace Taylor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Committee on Undergraduate Teaching in Economics and Training Economists가 구성되어 학부 경제학 교육 전반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1950년에 출판된 이 위원회의 연구보고서가 어떤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으나 경제학회에서 경제학 교육에 관한 대형 연구사업을 추진했다는 사실 자체가 주목할 만한 사건이었다고 판단된다.<sup>2)</sup> 1955년에는 AEA 산하에 Committee on Economic Education이 상설위원회로 설치되었고 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 대학원 그리고 일반시민의 경제학 교육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제교육 주제가 연구되고 토의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성과들은 주로 JEE (Journal of Economic Education)에 발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경제학 교육에 관한 위기의식이 표면적으로 노출되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아주 최근의 일인데 이러한 움직임의 가장 강력한 촉매가 되었던 것은 학부제 실시 이후 경제학 전공지망생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sup>3)</sup> 학생

1) Hinshaw and Siegfried (1991)에 의하면 Patten (1890)은 논리적 사고를 훈련시키는 과목으로 수학이나 물리학 대신에 경제학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Clow (1899)는 중고등학교 수준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는 것의 가치를 역설하면서 중고등학교에서의 경제학 교육의 가능성에 대한 당시의 논쟁을 인용하였다고 한다. 중고등학생들에게 경제학을 가르치는 것이 무리라는 주장과 학생들보다 제대로 경제학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없는 것이 문제라는 주장이 있었다고 한다.

2) Taylor (1950).

3) 이와 같은 현상이 통계적으로는 아직 잘 나타나지 않는 것 같다. 말미에 첨부한 <부표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경제학과 입학생의 전체 대학 입학생에 대한 비율은 1984년이래 감소추세에 있다. 그러나 정원이 통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경제학과에 대한 수요의 감소를 나타낸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한편 졸업자에 대한 취업자의 비율을 보면 경제학과의 상대적인 우위가 IMF사태 이후 급속하게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들의 전공선택이 훨씬 더 자유로워진 상황에서 경제학 전공이 상대적으로 외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매우 피상적인 현상일 뿐이다. 또 일시적인 현상일 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의 경험을 계기로 “정말 우리가 경제학을 ‘잘’ 가르치고 있는가?”라는 매우 근본적인 반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경제학을 잘 가르친다는 것은 제대로 된 내용을 제대로 된 방법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 특히 부각되고 있는 문제가 가르치거나 연구하고 있는 경제학의 내용에 관한 문제이다. 경제학을 너무 어려운 이론 중심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경제학 연구에서 너무 기술적 또는 수학적인 방법론이 강조되는 것이 아닌가? 가치관의 문제를 적절하게 다루고 있는가? 등의 문제가 많이 토의되고 있고 아울러 교수 방법에서도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반성과 이러한 측면에서 개선방안들을 모색하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sup>4)</sup>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와 같은 반성과 논의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중요한 성과는 궁극적으로 경제학 교육이 개선되는 것이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나라의 경제학 교육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기를 원한다면 산발적인 문제의 제기에서 끝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물론 이것은 좋은 시작이지만 이제는 보다 체계적인 진단이 필요하고 이러한 진단에 입각한 처방이 나와야 할 때라고 본다.

이 글은 이러한 진단을 위한 접근방법으로 가장 경제학적인 방법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의 틀을 사용하자는 제안이다. 경제학 교육에서 얻고

---

이러한 지표들이 불완전하나마 경제학 교육의 위기론 확산을 설명하는 한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 4) 2000년 중 한국경제학회에 신설된 경제학 교육위원회에서 제일 먼저 논의되었던 주제들이 바로 경제학의 연구 및 교육 내용에 관한 문제들이었다(이지순, 2000; 박명호, 2000 등 참조). 경제학 교육방법론과 관련된 연구는 중고등학교 경제학 교육과 관련하여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학에서의 경제학 교육방법론에 대한 연구는 매우 희귀한 실정이다. 손정식(2000) 등 참조. 한편 미국에서는 Becker(1997, 2000), Becker and Watts(1995, 1996), Salemi and Siegfried(1999)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경제학 교육방법론이나 내용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Autume and Cartelier(1997), Medema and Samuels(1996)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경제학의 연구추세나 발전방향 그리고 연구방법론 등에 관한 반성과 문제제기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자 하는 것과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가장 비용-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등의 질문에서부터 출발하자는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접근은 정량화의 한계 때문에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량화가 어렵다는 것은 접근방법의 문제이기보다는 우리가 다루어야 할 주제가 가지고 있는 속성의 문제이다. 따라서 어떤 접근방법을 사용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문제라고 본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어떤 계량화된 측정을 시도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경제학을 가르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사회적 편익과 이것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들을 항목별로 식별하고 각각에 대해서 정성적인 분석평가를 시도함으로써 경제학 교육의 개선을 위한 전략적인 과제들과 방향들을 찾아보고자 한다.

먼저 우리는 경제학 교육에서 얻을 수 있는 사회적인 편익들을 평가한다. 그리고 이어서 경제학 교육이 수반하는 사회적 비용을 평가한다. 물론 이 글에서의 논의는 아직 초보적인 아이디어 제시 단계에 불과하므로 이 문제를 좀 더 발전시키고 구체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접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학 교육개선 방향의 시사점들을 정리해 본다.

## II. 경제학 교육의 사회적 편익

경제학을 가르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가치 있는 것이며 우리 사회에 어떤 편익을 가져다주는가? 우선 사적인 편익과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는 편익(이것을 편익상 공적인 편익이라고 부르겠다)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 1. 사적인 편익

경제학 교육에 대한 수요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 경제학 교육을 받는 것 그 자체가 하나의 소비행위가 될 수 있으며 동시에 이것은 투자행위가 될 수 있다. 경제학을 배우는 것이 즐겁고 그 즐거움 또는 성취감을 누리기 위해서 경제학을 공부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의 소비행위이며 따라서 그 나름대로 사회후생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경제학을 공부함으로써 자신의 미

래 소득을 높이거나 다른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다면 경제학 공부는 미래를 위한 투자 즉 인적자본투자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편익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며 어떻게 평가 또는 측정할 수 있는가?

#### 가. 현재적 편익 : 소비가치

경제학을 배우는 것이 즐겁고 재미가 있다면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미 편익을 얻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부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고 특권으로 생각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다.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 자체로 만족과 보람을 느낀다.

반면에 경제학을 공부하는 것이 어렵고 부담이 된다면 이것은 경제학을 투자 목적 등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중요한 비용이 될 수 있다. 비용편익분석에서 편익항목에 분류할 수 있는 것을 마이너스 비용항목으로 취급할 수 있고 반대로 할 수도 있다는 문제가 여기도 적용될 수 있지만 여하튼 경제학을 공부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편익이 될 수 있음을 일단 인정하고 넘어갈 필요는 있다고 본다.

#### 나. 미래의 편익 : 투자가치

대부분의 공부가 그렇지만 경제학 공부의 가장 일반적인 동기는 그것을 통해서 장래의 생활이 더 안정되고 윤택하기를 기대할 수 있다는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행동한다고 가정한다면 각자는 주어진 제약하에서 자신의 평생 순후생의 현재가치를 극대화하는 선택을 하려 할 것이고 경제학을 공부하기로 선택한 사람도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자신의 제약과 상황에서 그리고 주어진 정보를 판단해 볼 때 경제학을 공부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에서 그러한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선택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한 것이지만 경제학을 공부함으로써 소득을 더 얻거나 기타 미래에 더 많은 편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제학을 공부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기대 편익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본다.

##### (1) 소득증가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대소득이 늘어난다는 것이다.<sup>5)</sup> 시장상황이 주어져 있을 때 어떤 수준에서 어떠한 내용의 경제학 공부를 어느 정도 하는가에 따라서 기대

소득 변화의 정도나 내용이 달라지겠지만 대체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학위나 경제학과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거나 직장에서 승진에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경우이다. 소위 '간판'(credential) 따기의 한 방법으로 경제학 학위가 사용될 수 있다. 물론 공무원이나 기타 직장의 취업에 경제학 과목 시험을 거쳐야하는 경우에는 목적은 비슷하지만 단순한 간판따기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경제학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지식 내지는 요령을 습득하기 위한 공부를 할 수 있다. 이러한 동기의 경제학 공부의 계속 유효하려면 장기적으로 생산성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경제학 공부를 바로 생산성과 연결시킬 수 있다. 직장인이 자신의 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인정을 받고 승진이나 보수증대 등을 얻는 데 경제학을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꼭 학위를 얻지 않는다고 해도 직장인 스스로가 경제학과 관련된 공부를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될 것이다. 혹은 취업 전이라고 해도 예를 들어 영문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취업 후 자신의 업무 처리능력의 향상을 염두에 두고 경제학이나 경영학을 미리 공부해 둔다면 이것도 자신의 생산성 증대를 통한 소득증대를 기대하는 경우로 생각할 수 있다.

세 번째의 경우는 경제학 또는 경제와 관련된 지식이 바로 수입과 연결될 수 있는 경우이다. 기업경영을 하고 있거나 주식 또는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경우, 기타 개인의 투자 의사결정을 해야하는 경우 경제학 지식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학교 교육에서 이러한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고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이나 인터넷 등 다양한 정보제공원천을 통해서 이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물론 경제학 지식의 증가가 개인의 재테크 능력을 향상시켜 그의 소득을 높여주었다고 해도 그것이 반드시 사회 전체의 후생증가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장할 수는 없다. 증권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 현대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들의 자본이득이 증가하는 것이 반드시 사회전체의 부가가치 증가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sup>6)</sup>

5) 교육의 수익에 관한 연구 즉 인적자본 형성에 관한 연구의 대부분은 교육이 소득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Schultz (1988) 등 참조.

6) 최근 많은 우수한 인력이 주식 등의 데이트레이딩의 연구와 실행에 몰두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사용되는 자원이 사회후생의 순증을 가져올 것인지 의심스럽다.

## (2) 소비 효율화

앞에서 경제학을 공부하는 것이 일종의 소비행위가 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지만 경제학 공부를 통해서 개인의 소비생활이 개선될 수 있다면 그것도 사회후생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만일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이 소비를 더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면 그래서 같은 소득을 가지고도 더 많은 효용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은 틀림없이 사회적인 편익의 증대를 가져온다. 물론 경제학이 사람들의 소비행태를 연구하지만 합리적인 소비생활이 어떤 것인가를 직접 가르쳐준다고는 말할 수 없다. 효용극대화 이론을 아는 것과 실제로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하는 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을 수도 있다. 여하튼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경제학을 공부하는 또 하나의 목적은 앞에서 공부 자체를 즐기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 경제학을 알고 지내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수 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고 지내고 싶다는 것이다. 단순히 모르면 답답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일종의 문화적인 소비수요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문학이나 예술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것이 반드시 그의 소득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삶이 풍요로워진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경제 돌아가는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토론하면서 만족과 보람을 느낄지도 모른다.

## (3) 묵시적 보상

경제학을 공부해서 개인이 얻을 수 있는 보상의 또 한가지 형태는 보이지 않는 보상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학을 공부해서 국가나 사회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포부를 말하는 신입생 후보자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 공무원 지망생들도 대부분 비슷한 포부를 말한다. 훌륭한 학자가 되어 경제학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사람도 있다. 이들은 금전적 보상 이외에 다른 보이지 않는 보상 즉 보람, 명예, 권력 등을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sup>7)</sup> 이러한 것이 개인들에게 만족을 준다면 그것도 사회후생을 증대시키는 요소들이며 경제학 교육의 사회적 편익의 한 부분이 될 것이다.

7) 이들의 활동이 실제로 사회에 어떤 기여를 했다면(외부효과) 그것은 물론 별도의 사회적 편익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부분은 다음 절의 공적인 편익에서 논의된다.

## 2. 공적인 편익

이상은 개인에게 귀속되는 사적인 편익들이다. 그러나 경제학을 공부함으로써 사회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다. 넓은 의미의 외부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을 생각할 수 있다.

### 가. 공적인 직업의 외부성

경제학을 전공하고 공직을 갖는 경우 그 사람의 일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그 자신의 보수보다 훨씬 규모가 큰 경우가 많이 있다. 물론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고 공직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행정부나 사법부의 공무원, 정치인 등 공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정책을 결정하거나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경제분야에 있는 공직자들이건 경제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분야에 종사하는 공직자들이건 모두 경제학적인 소양과 이해가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의사결정의 질적인 차이는 작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만일 이들이 경제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잘못된 결정을 한다면 경제 전체에 매우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다.

### 나. 사적인 직업의 외부효과

기업경영자, 금융인, 언론인, 학자, 교사, 각종 경제경영관련 컨설턴트, NGO 활동가, 노동조합간부 등 민간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의사결정이 사회에 현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들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종류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시장경제의 원리를 이해하고 거시경제의 상황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있다면 사적인 이익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커다란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이들이 잘못된 결정을 하거나 잘못된 정보나 인식에 바탕을 둔 주장으로 공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준다면 그 사회적 폐해는 매우 클 수 있다.

이 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편익의 하나는 순수한 학문으로서 경제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활동이 가져오는 외부효과이다.<sup>8)</sup> 주로 인문학 분야에서

8) 이런 기여는 경제학자들이 정책이나 기타 응용분야에서 기여하는 것과는 구분되는 것이다.



이러한 가치를 강조하지만 이러한 가치는 거의 모든 학문 분야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편익의 가치는 마치 멸종위기에 있는 생물을 보호하는 일의 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운 것처럼 그 가치의 크기를 말하기는 매우 어렵다.

다.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일반 시민이 가지고 있는 경제지식과 경제의식의 영향

개인들이 합리적인 사고를 할 때 집단적 의사결정도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커진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의 사회적 의사결정비용이나 정책 집행비용이 현저히 줄어들 수 있다.

### 3. 편익의 평가

#### (1) 사적인 편익의 평가

이상에서 우리는 경제학 교육이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편익항목들을 점검하였다. 어떤 의미에서 이러한 항목들을 식별하고 나열하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정작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편익항목들을 어떻게 하면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측정 또는 평가하고 집계하느냐이다. 이 글의 시작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정량적인 측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집계도 가능하지 않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상기 여러 가지 편익항목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든지 각 편익항목에서 그 편익의 정도에 영향을 주는 결정적인 변수나 요인이 어떤 것들인지를 알 수 있다면 이러한 것은 경제학 교육과 관련된 전략선택에 매우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제시한 항목별로 그 상대적 중요성과 평가방법을 검토하기로 한다.

먼저 사적 편익 중 소비가치는 거의 무시해도 좋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경제학을 공부함으로써 지적 호기심이 채워지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편익이 경제학 교육정책에 어떤 영향을 줄만큼 중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

경제학 교육의 가장 중심적인 편익은 사적인 투자가치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소득상승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수업료를 내고 경제학을 배우는 사람의 대부분은 이와 같은 투자가치를 생각하고 인적자본 투자의사 결정을 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효과는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취업하는

직장의 인사담당자들을 인터뷰함으로써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경제학 전공자와 비전공자간의 업무능력의 격차가 있는지 등을 질문할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소득자료를 가지고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간의 소득차이를 계량경제학적인 방법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sup>9)</sup> 경제학 과목의 이수와 연결하여 분석할 수도 있고 경제학 이해도 테스트의 결과와 소득이나 기타 업무성과지표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다. 물론 경제학 관련 학위를 얻기 위해서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을 추정하여 이것을 경제학 교육의 편익을 나타내는 값으로 사용할 수 있다.<sup>10)</sup> 이것은 경제학 교육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사적 편익의 현재가치의 하한(下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위한 자료의 수집이 쉽지는 않겠지만 자료를 생산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판단된다.

부동산이나 증권투자 등을 통해 경제학 지식을 직접적으로 자신의 소득창출에 활용하는 사람들에게 경제학 지식이 얼마나 유용한지를 평가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교적 관심을 덜 가져도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이들이 주로 얻는 소득은 자본이득이어서 사회 전체의 후생집계에 포함시키기가 어려울 수 있고 또 이들에게 필요한 경제학적 정보나 지식의 대부분은 공교육 과정을 통해서 전수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물론 투자가들의 소득을 얻는 데 사용된 경제학 지식이 전부 비공식적 경로를 통해서 획득된다는 뜻은 아니다. 당장의 국내외 경제동향이나 주요 경제변수의 움직임과 그러한 움직임의 시사점 등은 다른 여러 종류의 비공교육적인 경로를 통해서 얻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러한 경제관계의 기본원리나 개념 등 원론적인 부분은 공적인 교육을 통해서 습득된 것일 수 있다. 이 부분은 생산성효과와 같이 다룰 수 있을 것이다.

투자가치 중 소비효율화와 묵시적 보상에 해당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할

9) 특정 전공, 특히 경제학 전공자의 소득을 다른 전공자들과 비교하여 실증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교육기간뿐만 아니라 교육내용 등 교육과 관련된 다른 변수가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로 이 분야의 연구가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10) 이 경우에는 비용의 추정과 관련하여 주의해야할 점이 있다. 개인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 명시적으로 지불한 용의가 있는 금액(등록금 등)의 상한은 교육에서 얻기를 기대하는 한계편익에서 자신의 다른 비용들 즉 시간비용이나 책값, 심리적 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과 일치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편익을 추정하는 경우 그 편익은 일종의 총편익에서 등록금 등 이외의 비용을 공제한 부분적인 순계개념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학에서 소비자 이론을 가르치지만 그것이 개인의 소비생활 합리화를 가르치는 것은 아니다.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들의 직업 중에서 일을 하면서 보람이나 기타 만족을 느낄만한 일이 많이 있지만 이것은 경제학에만 국한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또 극히 주관적인 것이어서 앞에서의 소비가치처럼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경제학 교육의 사적인 편익은 대부분 그것이 개인의 소득에 주는 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이것이 경제학 교육정책에 주는 함의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생각된다.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시장원리에 따른 개인적인 선택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적인 관점에서는 다음에 개관하는 공적인 편익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 나. 공적인 편익의 평가

공적인 편익은 매우 중요하지만 대부분 외부성의 성격을 갖는 것이어서 그 평가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학을 전공하고 경제부처 관료가 되는 사람들이 시장경제의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거시경제의 여러 현상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간에는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또 국회의원들이 시장경제 원리를 잘 아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 국가전략이나 정책의 선택이 현저히 달라질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이 국민후생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도 있다.<sup>11)</sup>

언론인들이나 학자 그리고 청소년들의 의식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교사들, 최근에 와서 정책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는 NGO운동가들이 경제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에도 사회적 선택결과에 중요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기업경영인, 금융부문 종사자 등 국가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사람들의 의사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것은 개인이나 개별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국가경제 전체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국민의 경제의식이 건전하고 일반 대중이 시장경제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회적 선택의 비용이 줄어들고 사회적 선택의 결과도 보다 합리적인 것이 될

11) 물론 어설픈게 아는 것보다는 아주 모르는 편이 나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표 1〉 경제학 교육의 사회적 편익항목 개요

편익항목				상대적 중요성	가능한 평가방법
사적편익	소비가치			중요하지 않음	-
	투자가치	소득상승	credential	매우 중요함	설문조사 지불용의조사
			생산성	매우 중요함	설문조사 소득자료를 이용한 계량분석 지불용의조사
			직접수입	중요하지만 공식적인 교육의 영역을 벗어나는 부분이 많음	
		소비효율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함	설문조사
		목시적 보상		상대적으로 덜 중요함	설문조사
	공적편익	공적직업의 외부성			매우 중요
사적직업의 외부성			매우 중요	사례연구	
일반시민의 경제지식			매우 중요	사례연구, 설문조사 및 계량분석	

가능성이 훨씬 높다.<sup>12)</sup> 각 이익집단들의 무리한 요구와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낭비, 그리고 이러한 무리한 요구의 결과로 나타나는 파행적인 정책이나 불합리한 대안의 선택 등은 우리사회에 막대한 손실을 끼쳐왔다고 생각된다. 정치인들이 문제가 많다고 비판하는 경우가 많지만 정치인들의 불합리한 행동은 많은 경우 유권자들의 불합리한 의식구조를 반영한 것일 수 있다.

이것은 경제학 교육이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편익의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이지만 그 편익의 규모를 계량화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시장원리에 반하는 경제정책을 선택하거나 국제경제나 국내 거시경제의 흐름을 잘못 파악하여 최선의 정책선택에 실패한 경우들을 사례연구 하는 것은 이러한 측면에서의 경제학 교육의 가치를 간접적으로 감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역사적으로 경제가 잘 운영되던 기간 중에 주요 경제정책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들의 시장

12) 경제학의 이해도가 사회적 선택의 질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가에 관한 연구는 찾기 어렵지만 일반적인 교육수준이 정치나 사회에의 참여도와 사회성원 상호간의 신뢰 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 연구들은 찾아볼 수 있다. Nie, Junn and Stehlik-Barry(1996), Hilliwell and Putnam(1999) 등 참조. 특히 Hilliwell and Putnam(1999)은 자신의 교육수준과 지역평균 교육수준이 사회적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실증적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경제에 대한 이해 정도를 평가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경우의 문제는 경제학 교육의 문제이기보다는 정책결정 책임자의 선택문제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표로 요약한 것이 <표 1>이다.

### Ⅲ. 경제학 교육의 사회적 비용

경제학 교육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대부분 직접적이어서 편익의 측정보다 는 쉬울 것으로 생각된다. 개인이나 민간기업 또는 기타 민간단체들이 부담하는 사 적 비용과 정부가 부담하는 공적 비용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 1. 사적 비용

사적 비용은 주로 교육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을 가지고 측 정할 수 있다. 교육서비스 공급곡선이 있다면 그 밑의 면적으로 교육의 사회적 비 용을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서비스의 경우 수요자도 상당한 비용을 부담한다. 수요자가 부담하는 비용 중에서 공급자에게 지불하는 비용 즉 등록금 등 을 제외한 나머지는 교육의 비용으로 계상되어야 한다. 등록금을 제외하면 책값이 나 기타 공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의 기회비용 등이 중요한 비용항목일 것 이다. 만일 경제학을 공부하는 것이 어렵고 고통스럽다면 그러한 심리적 또는 정신 적 비용도 계상해야 할 것이다.

#### 2. 공적 비용

공공적 비용에는 우선 경제학 교육을 위해서 정부나 기타 공공기관이 부담하는 비용이 포함된다. 중·고등학교와 초등학교에 대한 경제학 교육관련 비용과 대학에 대한 지원 중 경제학 교육에 귀속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사회교육으로서의 경제 학 교육을 위해 정부가 지불하는 비용들을 우선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정책을 홍보하거나 국민의 협조를 구하는 데 사용되는 홍보비 같은 것 중에

서도 부분적으로 경제학 교육의 비용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공적 비용은 경제학 교육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부 비용이다. 경제학 교육의 결과로 지나치게 이기적인 사람이 된다는 국민들이 경제를 너무 잘 알게 되어서 거시경제정책의 효과가 없어지는 결과가 나타난다면 이것은 사회적인 관점에서 비용에 합산해야 할지 모른다.<sup>13)</sup>

### 3. 비용의 평가

경제학 교육과 관련된 사적 비용의 평가는 번거로운 자료수집과 계산이 요구되기는 하겠지만 본질적으로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경제학 교육과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공적 비용 중에서 정부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은 예산자료 등을 통해서 추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경제학 교육과 관련한 외부비용은 현실적으로 그 존재를 증명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다고 본다. 물론 이러한 종류의 비용이 실재한다고 해도 그 크기는 무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개인들이 부담하는 비용 중에서 시간과 관련된 비용을 추정하는 데 약간의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경제학 전공자라고 하더라도 다른 과목들을 공부하면서 사용하는 시간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또 비전공자가 경제학 개론 같은 과목을 듣는데 사용하는 시간의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등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 IV. 경제학 교육정책에 대한 함의

경제학 교육의 비용과 편익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한다면 경제학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함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상태로서는 편익과 비용의 평가 결과를 가지고 다룰 수 있는 문제 정도를 나열할 수 있다.

13) Frank, Gilovich and Regan (1993)은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더 이기적이 되고 비협조적이며 덜 정직한 태도를 갖게 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 1. 목적과 대상에 따른 교육 서비스의 분업화

경제학 교육에서 얻을 수 있는 편익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양하다. 이러한 다양한 편익을 극대화하면서 비용은 줄이는 것이 경제학 교육을 개선하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다양한 편익을 얻는데 어떤 그룹을 대상으로 어떤 교육을 시키는 것이 필요한가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러한 교육을 누가 담당하며 어떤 방법이 적절할 것인가 등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경제학 교육서비스의 분업화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지금 일반 교양교육, 경제분석가, 정책담당자 등을 양성하기 위한 학부 및 대학원 과정의 전공자 교육, 직장인 등을 위한 전문대학원 교육, 초·중·고생을 위한 경제교육, 기타 성인들을 위한 경제교육, 투자가 및 경영인 등을 위한 전문경제교육 등이 다양한 단계에서 다양한 그룹을 대상으로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학 교육체계의 합리화에 관한 보다 근본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이것은 경제학뿐 아니라 경제학 훈련을 필요로 하는 인접분야와의 긴밀한 협조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나 논의에서 경제학 교육의 직접적인 편익이나 간접적인 편익의 구성과 크기 등에 대한 연구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비경제전공자로서 중요한 공직을 담당할 사람들(예컨대 법조인, 외교관, 정치가 등)과 공직은 아니지만 국민의 여론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예컨대 언론인, NGO 운동가 등)에 대한 경제학 교육의 외부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수요를 어떤 체제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인지 등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 2. 경제학 교육 세부 부문간의 적절한 자원배분

위에서 제기한 분업화의 논의는 각 세부 부문간의 교육자원배분의 최적화 문제로 발전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전략적인 부분이 어디인가를 찾아낸다거나 경제학 전공자의 최적 규모에 관한 논의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경제학 교육과 관련된 자원배분의 최적화를 위해서도 시장원리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서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다. 편익비용분석의 접근을 통해서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부문이 어디인지를 찾아내는 것이 가능

하다고 본다. 즉 외부성이 강하게 작용하는 부분이라든가 불완전한 정보 때문에 자율적 선택이 왜곡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인가 등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경제학 교육의 사적 편익과 관련된 자원의 배분은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비교적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지금까지 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학은 가격통제에 의한 배급방식으로 서비스 구매자를 선택하였고 이와 같은 공급자 중심의 시장구조로 말미암아 서비스의 내용구성이나 생산방식의 비효율성이 개입될 여지는 얼마든지 있었다. 최근에 와서 학부제의 도입과 전공선택의 자율성 확대로 말미암아 경제학 전공자의 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게 된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시장원리가 이 시장에서도 부분적으로나마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생각되며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이 시장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의 원리가 도입된다고 해도 다양한 왜곡이 나타날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므로, 이 시장에서도 공정하고 효율적인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도록 하는 노력은 필요할 것이다.

경제학 교육의 공적인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대학에 있는 경제학자들에게는 덜 매력적인 부분일 수 있다. 전공자들을 가르치고 우수한 경제학자를 길러내거나 경제학 분야의 새로운 지식을 생산해 내는 것이 개인적으로 더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비용편익의 관점에서 보면 대학의 사회계열 비경제학 전공자들에 대한 경제학 교육이나 일반 교양과목으로서 경제학 교육 그리고 중고등 학교의 경제학 교육, 나아가서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경제학 교육 등이 매우 중요한 전략적 부문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sup>14)</sup> 특히 이 분야는 시장원리로는 해결될 수 없는 부문이기 때문에 정부개입이 요구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중·고등학교의 사회과 교육과정이 적절하며 교과서와 경제학 과목 담당교사 양성에 적절한 정도의 자원투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sup>15)</sup> 공무원 채용제도, 법조인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선발 시스템, 경영학 교육 시스템 등이 이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경제학 이해수준을 충족시키기에 적합한지를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반 교양과목으로 적합

14) 일반 시민에 대한 경제교육과 중고등학교 경제교육에 대해서는 한국개발연구원 부설 국민경제교육연구소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지속해 왔다.

15) 한국개발연구원의 국민경제연구소외에도 경제교육학회, 한국사회과교육학회 등이 중고등학교 경제학 과목 교육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 왔다.



한 경제학 교과과정의 개발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분야이다.

### 3. 교육 내용과 방법의 최적화

각 대상과 단계에 대한 교육의 목적 즉 기대하는 중심적 편익의 내용이 분명해 진다면 어떤 교육서비스의 내용이 가장 적절한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 내용의 결정에 있어서 학생이나 기업 등 수요자들의 요구가 정확하게 파악되고 수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교육 내용의 결정을 수요자들에게만 맡기기 어렵다는 것은 재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교육에 대한 수요는 매우 제한적인 정보와 인식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의 연구에 바탕을 둔 교과과정과 구체적인 교육 내용의 선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더구나 공적인 편익과 관련된 교육투자의 내용에 관해서는 수요자들의 의견이 표출될 여지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며 위에서 제시한 비용편익분석 접근법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방법의 최적화는 교육학자들의 주된 관심사이다. 아무리 좋은 교육 내용이 개발되어도 그것이 정확하게 전달되어 습득되고 응용되지 못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대체로 이 문제에 관심을 별로 두지 않는 것 같다. 교육방법의 선택은 교육의 비용과 밀접히 연관된다. 입과 분필(talk and chalk)만 가지고 대형강의실에서 많은 학생들을 놓고 가르치는 것이 가장 비용이 작게 드는 방법일 수 있다. 그러나 효과와 연계하여 가장 비용-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 4. 경제학 교육과 관련된 기초 자료수집 및 연구의 강화

우선 경제학 교육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연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중고등학교의 경우 부분적인 연구와 시험적인 수준의 경제학 이해도 테스트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경제학 교육에 투입되고 있는 기본적인 자원, 특히 경제학을 가르치는 교사의 현황 등에 대한 자료가 충분히 수집되어 있지 못하다. 대학교의 경우는 이와 같은 연구가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경제학을 어느 정도 가르치고 있고 어떤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가르치고 있는지 그리고 교육의 성과는 어떤지 등에 관

한 기초조사에서부터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인적자본형성에 관한 연구를 경제학 분야로 더 심화해서 추진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전략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경제학 교육의 공적 편익을 측정할 수 있는 연구들이라고 생각된다. 일반 시민의 경제의식에 대한 조사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좀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며 특히 특정 집단, 예컨대 언론인, 법조인, 공무원, 사회운동가, 교사 등에 대한 경제의식 조사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아울러 우리경제의 중요한 전기를 가져왔던 중요한 정책이나 전략결정 과정에 대한 심층사례연구를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경제학 전공자들에 대한 경제학 교육 뿐 아니라 비전공자 또는 인접분야 전공자들의 경제학 교육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조사와 연구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본다.

## V. 맺음말

이 글에서 우리는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경제학 교육의 문제점들을 사회적 비용 편익 분석의 접근방법을 통해 진단하는 체계를 제시하였다. 문제가 되는 사안의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항목별로 파악할 수 있다면 어디를 어떻게 고쳐야할지를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다. 경제학 교육에 문제가 있다면 바로 경제학 교육의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평가해 봄으로써 어디에 문제가 있고 어떤 부분부터 손을 대야할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이러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접근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물론 경제학 교육의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려는 훨씬 더 많은 노력과 자원이 투입되어야 한다. 특히 경제학 교육과 관련된 기초 자료를 수집하여 축적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설문조사는 비용과 편익을 평가하는 기초 자료수집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비용과 편익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에 기초하여 전략적인 부분을 파악하고 시장적인 접근과 아울러 공공부문의 개입필요성, 그리고 경제학자들이 공동적으로 대응해야 할 문제 등을 정리하고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특정한 교육학설이나 가정 또는 이념에 입각한 '교육개혁' 스타일의 접근은 균형을 잃거나

합리성의 결핍을 수반하게 될 위험이 크다. 경제학 교육의 문제가 제기된 이상 경제학자답게 합리적인 접근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해결방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

## ■ 참고 문헌

1. 박명호, "경제학은 '딱딱한' 학문이어야 하는가?," 한국경제학회 심포지엄 '한국 경제학 교육, 이대로 좋은가?' 발표논문, 2000.
2. 손정식, "모의증권투자 게임의 경제 교육적 효과," 『경제교육연구』, 제5호, 1999, pp. 123~146.
3. 이지순, "경제학 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경제학회 심포지엄 '한국 경제학 교육, 이대로 좋은가?' 발표논문, 2000.
4. Autume, Antoine D. and Jean Cartelier, *Is Economics Becoming a Hard Science?*, Edward Elgar (eds.), 1997.
5. Becker, William E., "Teaching Economics in the 21st Century,"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14, No. 1, Winter 2000, pp. 109~119.
6. Becker, William E., "Teaching Economics to Undergraduate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XXXV, September 1997, pp. 1347~1373.
7. Becker, William E. and Michael Watts, "Teaching Tools: Teaching Method in Undergraduate Economics," *Economic Inquiry*, Vol. XXXIII, October 1995, pp. 692~700.
8. ———, "Chalk and Talk: A National Survey on Teaching Undergraduate Economics," *AEA Papers and Proceedings*, Vol. 86, No. 2, May 1996, pp. 448~453.
9. Clow, F. R., "Economics as a School Study," *Economic Studies*, Vol. 4, 1899, pp. 183~246.
10. Frank, H. Roert, Thomas Gilovich and Dennis T. Regan, "Does Studying Economics Inhibit Cooperation?"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7, No. 2, Spring 1993, pp. 159~171.
11. Helliwell, John F. and Robert D. Putnam, "Education and Social Capital," NBER working paper 7121, NBER, 1999.
12. Hinshaw, E. Elton and John J. Siegfried, "The Role of the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in Economic Education: A Brief History," *Journal of Economic Education*, Vol. 22, No. 4, Fall 1991, pp. 373~381.
13. Medema, Steven G. and Warren J. Samuels, *Foundations of Research in Economics: How Do Economists Do Economics*, Edward Elgar (eds.), 1996.
14. Nie, Norman H., Jane Junn, and Kenneth Stehlik-Barry, *Education and Democratic*

*Citizenship in America*,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1996.

15. Patten, S., "The Educational Value of Political Economy," *Publications of the AEA*, Vol. 6, pp. 465~502.
16. Salemi, Michael K. and John J. Siegfried, "The State of Economic Education," *AEA Papers and Proceedings*, Vol. 89, No. 2, May 1999, pp. 355~361.
17. Schultz, T. Paul, "Education Investments and Returns," Chapter 13, Chenery, H. and T. N. Srinivasan(eds.), *Handbook of Development Economics*, Vol. I, Elsevier Science Publisher, 1988, pp. 543~630.
18. Taylor, H. (ed.), "The Teaching of Undergraduate Economics," *Supplement to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40, 1950.

〈부록〉

〈부표 1〉 학부 경제학 전공자 취업비율 및 입학자 비율 추이

연도	취업자/졸업자 비율(%)			경제학과 입학자/전체 입학자 비율(%)
	경제학과	사회계열	전체졸업생	
1983	60	34	50	2.74
1984	55	34	48	3.20
1985	50	40	41	3.25
1986	49	45	37	3.28
1987	48	41	41	3.09
1988	52	24	44	2.83
1989	55	20	46	2.84
1990	54	19	48	2.84
1991	57	18	52	2.73
1992	57	20	51	2.63
1993	51	23	48	2.59
1994	56	21	52	2.57
1995	61	25	54	2.68
1996	62	23	55	2.56
1997	58	24	53	2.55
1998	44	25	44	2.59
1999	44	23	44	2.03

자료: 교육부, 교육(문교) 통계연보(각 연도)에서 수집한 자료로 계산

주: 경제학과에는 1994년까지는 경제학과, 그 이후는 경제학과 및 경제 및 무역 통상계열을 포함.